다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One Asia

정치외교학과 김하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역동적인 지역은 어디일까? 아마 ‘아시아’일 것이다. 아시아 대륙에는 총 47개의 국가가 있으며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국가들의 총인구는 약 40억 명 이상이다. 종교도 민족도 정치시스템도 다양하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비슷한 문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로 보자면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많다. 또한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시아를 규정하는 개념과 관점, 시각이 다르다. 이러한 아시아를 하나로 규정지을 수 있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가?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해 바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공동체론은 이 질문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윤강 형식의 수업이다. 원 아시아재단,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 일본과 중국 정책실무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한 학기 동안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이 수업의 주요 내용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 전반부에는 아시아라는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각 주요 국가들의 인식 차이, 아시아공동체 필요성과 함의와 같은 주로 전체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을 다룬다. 후반부에는 한중 및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황, 중일 관계의 변화,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정책, 아시아 역내 이주와 문화, 동남아시아의 현황, 역사 문제에 대한 각 국가의 다른 장소기억 등 현실적 차원에서 아시아공동체가 실현 가능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각 국가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는 초국가적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아시아 또한 아시아 역내의 많은 인적 및 물적 교류로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커다란 경제 및 문화권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서 아시아 내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고 상호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일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각 국가의 다자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 계기는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은 동남아시아와 더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자적 협력체를 만들자는 공통된 논의를 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이해관계에 의한 지역 내 다자협력에 불과했고 하나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했다. 현재에도 이뤄지고 있는 다자협력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논리, 다른 배경하에서 각 주도국의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라는 개념보다는 중화주의를 더욱 중시하고 일본은 일본의 경제적 영토를 중시한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시아공동체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아 개념에 대한 인식, 필요성, 참여국의 범위, 주도권 등에 대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견해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양자갈등이 심하다는 것 또한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아시아 주요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존재해온 갈등은 영토 문제와 군사동맹 등 지정학적 관계에 따른 안보 갈등부터 과거사 갈등과 같은 감정적 갈등까지 다차원적이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북한까지 합세하여 동북아시아의 갈등은 더욱 얽히게 되었다. 이런 현실적 장애물 속에서 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길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시아공동체가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이러한 다른 정체성과 이해관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유럽연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럽 국가들도 예부터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매우 심해 전쟁을 자주 겪었음에도 통합을 이뤄냈다. 또한 많은 유럽사람에게 전쟁의 아픔을 주었던 독일은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럽연합의 통합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통합 전 유럽 국가 간에도 경제적 편차가 존재했었다. 이런 점에서 국가들 사이의 다른 정체성과 이해관계, 현실적 어려움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시아 또한 당면한 어려움이 협력의 기회로 전환된다면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먼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아시아국가들의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다. 영토 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반목했던 중국과 일본은 최근 협력의 기조를 보인다. 일본은 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자 중국 주도의 RCEP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중국 또한 미국 대신 자신이 신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안보적 위협이자 부담이었던 핵 문제의 해결에서 비핵화가 잘 진행된다면 동북아시아에 존재했던 냉전의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안보적 갈등을 한 차원 줄일 수 있게 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아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바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이자 목표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자국의 이익에 의해 우선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 국가는 이익만을 도모하고 이익에 기반한 단기적 협력만을 추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통제할 수준을 넘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젠가는 무력적 충돌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의 지도자들은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아시아의 평화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 또한 자제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가치를 아시아 사람들에게 지속해서 전달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은 아시아 시민으로서 아시아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및 당위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아시아공동체의 가치가 아시아의 어떤 정체성과 이익보다 우선되면 안됨을 상기하면서 평화에 역행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 정체성은 다를지라도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 포용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아시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